

News

땅투기 전면 차단…전 금융권 LTV 70%→40%로 강화

아시아경제

정부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상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을 기준 70% --> 40%로 제한 이어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장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를"…당국 "개선검토"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빛어지는 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일부 의견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전후 한 달간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점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분해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넉달 연속 상승…5대은행, '이자 장사' 호시절 다시 맞나

아시아투데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기준 총 대출 규모(원화대출총액)는 1284조4642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약 25조원 늘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 2월 총대출금리는 연 2.74%, 총수신금리는 연 0.85%로 예대금리차이는 1.89%포인트를 기록. 예대금리차도 지난해 10월 기점으로 계속 확대

사실상 원금보장 입소문에…은행권 국민참여 뉴딜펀드 완판

연합뉴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지난 1일 출출이 완판

해당 펀드는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매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2천억원 규모로 조성돼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자(子)펀드의 증권에 투자

금융당국, 삼성생명 암 보험 제재 이달 결론낼까

뉴스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징계 확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소위가 3차까지 이어지며 결정이 지연 소위가 3차까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 측은 타 안건들이 많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데이터 자회사 인수계획 취소

헤럴드경제

한화생명은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한화투자증권의 자회사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지분 100%를 인수를 목표했으나 4월 3일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시

그러나 보험산업 데이터 활용 규제 변화 전망 등에 따라 인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다자배상' 불가…금감원, NH투자에 원금 전액반환 권고키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 예정대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을 억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한생명도 실손보험 판매중단, 생보사 절반 이상 안판다

머니투데이

신한생명이 지난해 말부터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생명보험회사 중 10개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고, 절반도 안되는 7개사만 판매 중 보험사들이 잇따라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신규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손해율 악화로 적자가 심해져서다.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로 집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